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7년 1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일시 2017년 2월 13일(월) - 2017년 2월 26일(일)

<차례>

1. 국회 법안소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조기 대선 전 통과시킬 계획”
2. 성남시, 롯데그룹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반대 입장 밝혀
3. 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하반기 개원 예정
4. 정부, 차세대 유전자검사 건보 적용, 개인의무기록 온라인 열람 등 추진
5. 개정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요건 강화... 의사들 “현실 반영 못해” 반발
6.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필요성엔 각계 '공감'... 심의주체 다수화에는 입장차
7. 건보공단, 심평원 업무 계획 발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2월 13일 ~ 2월 26일 주요 동향

1. 국회 법안소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조기 대선 전 통과시킬 계획”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2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법안에는 한해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성, 나이 등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안과, 직장 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 고소득이 있는 경우에 내는 추가 건보료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위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 양쪽 다 개편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일치하였다. 하지만 개편 진행의 속도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법안소위에서는 건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달 안으로 논의를 마치고, 조기 대선 전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54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 성남시, 롯데그룹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반대 입장 밝혀

성남시가 롯데그룹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남시 소재 재 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은 2015년 9월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6년 10월, 롯데는 시가 3배 가격인 2900억 원을 제시해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에 성공했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료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선 법인 자산평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자금 대여와 이에 따른 과도한 부채비율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채권자 의견을 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롯데가 그런 거액을 내는 이유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성사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은 물론 병원의 영리화 소지가 있다. 조만간 이런 의견도 재판부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hani.co.kr/arti/society/area/783814.html?_fr=fb#cb

3. 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하반기 개원 예정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6월 준공된다. 2015년 말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워디그룹은 지난해 병원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 허가를 한 제주도는 올해 9월까지 최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워디그룹이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결정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 국제병원의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며 "2015년 복지부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901441>

4. 정부, 차세대 유전자검사 건보 적용, 개인의무기록 온라인 열람 등 추진

정부는 2월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차세대 유전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개인의무기록 온라인 열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작년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평가 중에선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추진 과제에선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전자의무기록 온라인 열람 등이 눈에 띈다.

작년 11월부터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한 신의료기술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NGS 임상 유전자 검사에 대해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50% 선별급여 적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전자의무기록은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p5. <첨부 1>

5. 개정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요건 강화... 의사들 “현실 반영 못해” 반발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법)에서 강제입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공립 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원요건은 기존 ‘정신질환이 있거나(or)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두 요건을 모두 충족(and)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입원 시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진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전문의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혹은 지정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입원 시 2주간 진단입원 기간을 두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최초입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어 비 자의입원 시 별도의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게 했다.

관련기사: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0642>

6.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필요성엔 각계 '공감'... 심의주체 다수화에는 입장 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광고 자율 심의기구를 의료인 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법인단체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2015년 정부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하는 조항의 위헌 판결 이후 의협에서는 의료광고를 자율심의 해왔다.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비 의료계 간 입장 차가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비 의료인이 심사를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시민단체 주관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수의기구가 설립될 경우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단체로 심의가 몰릴 것도 우려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광고업계는 민간 사전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그간 편의적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운영해 업계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062>

7. 건보공단, 심평원 업무 계획 발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 중소병원계가 요구해왔던 간호등급 차등제도 전면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을 1만 병상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환자중증도 등 근거에 기반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수가 조정 체계도 개발한다.

심평원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간호등급 차등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환자안전에 필수인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간호등급제 수가구조와 인력산정 기준도 개편한다.

관련기사: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013>

<첨부 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 발췌

신산업 규제, 114건 걷어냈다.

2017.2.16.(목)

유전체·바이오

○ (유전자검사) NGS 임상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고, 폐암, 백혈병 등 임상적 유효성이 큰 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17.3월).

*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 (생산)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 동·식물 활용시 국가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현 법령은 유전자변형미생물만 허용, '17.12월)

- 인체 및 동물 검용 의약품의 제조 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인체 및 동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요건과 절차가 완화된다('17.6월).

의료기기·의료기술

○ (심사) 시장진출의 소요 기간 및 비용의 경감을 위해 국내 소재 외국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이 우리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17.6월).

-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 또는 진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분류기준, 임상적 유효성 등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17.3월).

○ (평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운영하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16개월→3~9개월)된 데 이어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유망 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린다('16.11월).

-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유통)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설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완화되고('17.9월),

-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에 첨부되는 제품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16.12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의료정보

○ (정보) 전자의무기록의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클라우드 보관 개인의무기록을 환

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유·무선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7.9월).

- 개인 건강검진 정보도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본인이 디지털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17.1월).